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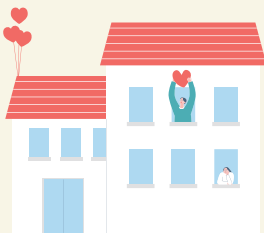
2025년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약자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청년 자립 지원 확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청년이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저리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자활성공지원금	희망저축계좌 II	청년자립자금
최대 150만원	정부매칭 360만원 ↓ 720만원	최대 1,200만원
탈수급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년 근속시 100만원 지원		2.0% 고정금리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 강화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오르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오른다.

생계급여(4인 가구)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2,200만원 → 2,341만원	연 7만원 → 14만원
주거급여(서울기준)	교육급여
연 632만원 → 654만원	연 73만원 → 77만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강화

취약계층이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의 지원금도 인상된다.

농식품바우처	에너지바우처(평균)
월 10만원 (4인 가구)	동계 31.4만원 하계 5.3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13만원 → 14만원 (1인)	월 10만원 → 10.5만원 (1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을 위한 직접일 자리를 확충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린다.

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연인원 63.3만명 ↓ 75.6만명	1.3만명 ↓ 1.4만명	3.2만명 ↓ 3.4만명

1인당 월 35~90만원



자립청소년·고립청년 자립 지원

청소년보호시설, 성폭력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또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활동을 신설한다.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구직단념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 지원
연 600만원	0.9만명 ↓ 1.2만명	1,000명

청소년보호시설·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취업역량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 지원

정서·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및 건강·문화·돌봄 지원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 자리를 확대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응급호출기를 보급한다.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늘리고,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3만명 → 110만명	20개소 추가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응급호출기
8,000명, 연 35만원	30만대 보급



장학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9구간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도 기존 중고생에서 초등학교(5~6학년)까지 확대한다. 📖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100만명 → 150만명	4.2만명, 연 240만원

근로장학금	꿈사다리장학금
14만명 → 20만명	2,000명 → 3,000명